

시론

문제는 경제와 외교에 있다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광주유학대학 학장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지도 열흘이 됐다. 세 개의 특검법이 발효돼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기대되는 일이다.

대통령실이 당분간이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용산으로 들어가고, 관저 또한 한남동으로 입주함으로써 곧바로 국정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또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해 보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지만 이재명 대통령만큼 일하기 좋은 여건을 가진 대통령도 없을 것이다.

첫째, 국회에서 180석이 넘는 압도적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를 제외하고는 처음이 아닐까 싶다.

둘째, 야당이 지리멸렬돼 대통령의 행보에 장애물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긴급조치'를 발동해 철권통치를 강행했던 유신 시대에는 김대중·김영삼이라는 강력한 야당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박정희에 항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처럼 강력한 지도자도, 국민의 지지도 없는 가운데 무기력하고 내분에서 빠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입법과정에서 그 어떠한 장애요인도

없는 셈이다.

셋째, 사법부마저도 대선을 앞두고 자중수를 둔 끝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회의 사법개혁이라는 갈날 앞에 숨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검찰 역시 여권의 검찰 개혁 압박 속에 자기 몸 추스르기도 바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오직 국민 뿐이며, 현재로서 국민의 지지만 확보한다면 그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놓여 있지 않는 셈이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순풍에 돛 단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으니 그것은 바로 경제(經濟)와 외교(外交)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돼 지난 3년에 걸친 윤석열 정부하에서 송두리째 망가지 버린 경제는 "지금 IMF 때보다도 더욱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속에 거의 체념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실제로 주요 상가는 물론이고 골목마다 '임대' 표지가 붙여진 빈 상가를 요점처럼 많이 본 적이 없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겠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마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그 후폭풍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실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지방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는 달리 오직 서울의 부동산 가격만 들썩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양극화와 거품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

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재명 외교'의 첫 무대인 셈인데, 대통령이 그곳에서 과연 어떠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미 간의 관세협상에 대한 개략적 논의가 있을지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본격적인 협상은 한국의 대선이후에 신청부제제에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정(內政)이아 국민의 지지(支持)라는 여건이 있지만, 집권층의 의중에 따라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외교(外交)는 상대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의 외교적 각축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그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 동북아 정세는 대만해협의 통행권과 국제무역 질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고도의 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우군(友軍) 확보에 진력하고 있다.

최근 주요 미국 인사들에게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유연성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선보일 새로운 '실용적 외교'에 대한 '사전견제'로 보인다. 점에서 새 정부의 대미관계가 연속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존립 의의와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할 때 모를지 새로운 정부가 이 두 가지 문제에 잘 대처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길 기대한다.

社說

에너지 대전환 시대 나주 '켄텍' 정상화 외면할텐가

전남도가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정부에서 총장 해임 압박, 표적 감사, 출연금 삭감 등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약속했던 연 2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2025년 100억원으로 줄었다며 과학기술원들과 비교해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피력했다. 켄텍은 2023년 12월 초대 총장 사임 이후 리더십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 전문성과 경영 역량,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선임돼야 하며 출연금도 즉각적으로 복원돼야 한다.

2022년 3월 특별법에 따라 개교한 우리나라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이다.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개교인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갖췄고, 영재학교·과학고·자율형사립고 등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높은 명문대로 성장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채용, 연구성과가 국내 10위권에 안착하는 등 학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합당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될 기후에너지부의 최최지로 에너지수

도 전남이 부상하고 혁신도시 내 유치기 추진되는 가운데 켄텍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여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RE100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기 됐다.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과 기술 패권 경쟁이 공급망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 세계는 '정의 전쟁'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 켄텍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잠재력을 지녔다. 에너지수도 전남을 탄탄히 다지는 기반이고, 에너지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실질적 토대다. K-에너지의 백년지대계다. 에너지 분야 R&D 수행과 미래 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규모는 작지만 지적으로 강력한 대학이다. 더 이상은 외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견인하는 허브다. 전남도와 나주시도 해마다 출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롤 모델이다. 2050년까지 세계 톱10 공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2배 늘어난 초등교사 명퇴 예상롭게 불 일 아나

초등교사들의 명퇴직이 부쩍 늘었다. 광주 시교육청 관내 국공립 학교는 2022년 29명에서 2023년 50명으로 급증했고, 2024년 64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엔 33명이 신청했다. 전남도 비슷하다. 2022년 104명에서 2023년 12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 120명으로 달했다. 올해 상반기엔 76명이나 일찍 교단을 떠난다. 이에 반해 중등학교는 정체 상태다.

개인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교육 현장의 위축과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억지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고충이 그것이다. 교육활동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학부모와 갈등이 먼저 꼽히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PTSD)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직 선호도가 과거보다 낮아진 현상이 심화되고 이대로면 신규 인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교육부는 교원보호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탈 움직임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명퇴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을 예사

롭게 볼 일이 아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교육청에서 거절당한 사례까지 있다. 갑작스레 생긴 빈자리에는 기간제와 신규 임용을 통해 메우고 있지만 자급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젊은 교사가 퇴직하는 일도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 업무 책임에 비해 낮은 처우도 개선해야 하겠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교장·교감들은 퇴직이 늦을수록 오히려 연금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만큼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당연히 약질적인 민원과 학부모 응대가 가장 큰 부담이고, 부적응 학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단순히 개인적 사유라고 안이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 정부에서 교원 회복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골몰하고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교원들이 교단을 등지고 있다.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학교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기고

사진 속 집 주소까지 '탈탈'...개인정보보호 교육 시급



김태희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서비스 사용 비중이 오르면서 아동들이 SNS에 사진을 게시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낯선 이에게 쉽게 사진을 공유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아동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유출은 단순히 해킹이나 플랫폼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들이 무심코 올리는 사진 속 배경, 위치 정보, 설명글 등으로 아동의 집, 학교, 그 외 개인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낯선 사람에게 친해지는 과정 중에 무심코 사진을 공유하다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다.

실제로 SNS에 올린 택배 송장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SNS에 위치 정보를 켜둔 채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진에 포함된 GPS 정보로 위치가 추적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많은 아동이 이것이 '위험한 정보'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SNS는 편하고 재미있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동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정보 보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진을 올리기 전에 얼굴이나 학교, 주소가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하거나 비공개 계정 설정과 위치 정보 끄는 법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심코 올린 사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도 좋아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된다는 경고성 전시회가 열린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에게 알려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디지털을 사용하는 아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기 전에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왜 보호해야 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온라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가는 아동들이 온라인을 이용할 때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 아동이 스스로 온라인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진 등을 올릴 때 한 번 더 확인을 요청하는 안내창이 뜨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사진을 식별하는 AI를 활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릴 경우 강하게 경고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요청드린다.

부디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독자투고

어르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올해 봄에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신안군 압해파출소로 첫 발령을 받았다. 도시와 달리 바다와 들판이 어우러진 이곳은 한층 조용하고 정겨운 마을이었다. 처음엔 낯설었던 시골길도 순찰을 돌며 점차 익숙해졌고, 고추밭과 양파밭 사이를 지나는 길목에서 허리 숙여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오랜 시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농사를 지으신 어르신들의 노력과 그 결실이 귀한지 알게 되면서, 이 마을을 지키는 일이 뜻깊게 다가왔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 아픔이 찾아왔다. 6월 초 양파 수확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밭 가장자리에 잠시 놓아둔 양파가 한 바구니 사라지고, 며칠 뒤에는 마을 작업을 끝내고 창고에 저장해 둔 마늘까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으신 한 어르신께서는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고, 팔아다가 손주 용돈이라도 주려고 했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고, 허탈한 표정으로 밭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접한 필자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저 물건을 잃은 게 아니라, 지난해 해 뜨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흘린 땀과 노력, 그 모든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압해파출소는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보관 장소와 외진 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수상한 차량이나 트랙터의 적재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한층 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마을 이장님들께는 마을 방송을 통해 절도 예방 수칙을 알리고, 주민들은 수확물을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 보관을 당부

드린다. 또한 저장 장소에 센서등이나 간이 CCTV 설치를 권장하고, 마을 주민들께서는 낯선 차량이나 사람을 발견했을 때 경계할 것을 당부한다.

압해파출소도 수확철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다.

수확한 농산물은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차량이 보일 땐 경계하고, 센서등이나 간이 CCTV 설치를 적극 권장드린다. 주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힘이 되고, 그것이 곧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압해파출소도 주민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정민우·신안경찰서 압해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25년 4대분야 부문별 (1): 24년 순위

분야	순위	점수
경제성	11위	16
정부효율성	31위	39
기업효율성	44위	23
국내경제	8위	7
국제무역	34위	47
국제투자	21위	35
고용	5위	4
물가	30위	43
재정	21위	38
조세정책	30위	34
제도여건	24위	30
기업여건	50위	47
사회여건	36위	29
생산성	45위	33
노동시장	45위	31
금융	33위	29
경영관행	55위	28
태도·가치관	33위	11
인프라	21위	11
기본인프라	35위	14
과학기술인프라	2위	1
교육	27위	19
기술인프라	39위	16
보안·환경	32위	30

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기록하며 작년부터 7계단 하락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지난해 기준 통계 등과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전체 69개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해(20위)보다 7위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떨어지며 전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인프라 분야는 11위에서 41위로 하락했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분야는 각각 11위, 31위로 집계돼 작년부터 5계단, 8계단 상승했다. 정치적 불안정 부문은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남녀 실업률 격차 부문 역시 2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국가별로 스위스가 작년보다 1계단 올라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도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9위), 중국(16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았고 일본은 35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